

국내 원전해체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원희연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글로벌협력실 과장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 경주 한수원 본사 3원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 모습

정부의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설치된 원전해체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정기적인 국내 원전해체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원전해체 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한 달여간 국내 원전해체 산·학·연 기관과 기업 377개를 대상으로 원전해체 인력, 기술, 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원전해체 사업 혹은 연구개발 수행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경남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에서도 원전해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고 있는 경남과 경북 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조사하였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지난 8월 24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참석한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원전해체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기업은 국내 해체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상용원전에 대한 해체 경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해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계획과 해체물량이 없어 사업실적(track-record)을 축적할 기회가 없고 초기 해체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2017년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원전 사업 축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혜택 제공과 자금 지원뿐 아니라 해체사업 분야를 명확히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과 교육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해 해체 전문인력 육성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전,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및 해체 전문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내 해체역량을 확보해서 글로벌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정부의 방향에 발맞춰 기업은 KEPIC, ASME, 한수원 품질 등 국내외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공공기관 등 기관에서 인

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하다 보니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연구용역 또는 과제 수행 연속성 결여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과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해체폐기물의 특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해체 관련 과제 수와 규모를 늘리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고리 1호기 도면과 같은 공개 가능한 자료들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전해체산업지원센터에서는 해체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KIIF